

의안번호	제133호	보 고 사 항
보 고 년 월 일	2011. 5. 2. (제 5 회)	

인터넷중독 예방·해소 추진현황 및 '11년 세부 시행계획

제 출 자	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간사 맹형규 (행정안전부 장관)
제출년월일	2011. 5. 2.

1. 보고주문

- 「인터넷중독 예방·해소 추진현황 및 '11년 세부 시행계획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.

2. 보고이유

- 최근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와 함께, 전체 사용자의 8%에 달하는 인터넷 중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까지 진화
- 인터넷중독의 예방·해소를 위해 7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『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(10.3)』을 수립·추진
- 이에 따라, 그간의 추진성과를 진단하고, 최근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토대로 미비점을 개선하여, 관계부처 합동 『'11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세부 시행계획』을 마련하여 보고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추진 배경

- 인터넷 중독률은 감소추세이나, 중독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함
 - '10년 기준, 전체 인터넷이용자(22백만명) 대비 8.0%(174만명) 수준
- 청소년 중독률(12.4%)은 성인중독률(5.8%)의 두배, 청소년 고위험군 증가, 중독 취약계층 확대, 스마트폰중독 출현 등 중독현상이 진화
 - 고위험군, 저소득·한부모 가정, 스마트폰 중독 등 분야별 선제 대응 필요

나. 추진 실적

- 종합계획수립 이후 범정부 공동대응을 통한 인터넷중독률 감소
 - 중독률은 '09년 대비(8.5%), '10년은 8.0%로 0.5%p 감소
 - 중독자수는 '09년 대비(191만명), '10년은 174만명으로 17만명 감소
-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기반 조성
 - 7개 유관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협력 강화
 - 인터넷중독 상담서비스, 대상별 예방교육 사업효과성 제고

다. '11년 세부 추진과제(案)

- 인터넷중독 확산 억제를 위한 포괄적 예방교육 실시(130만명)
 -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실시
 - 대상집단별로 현황, 사례, 예방법 등을 적용한 프로그램 운영
- 인터넷중독 해소 체계적·전문적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(36만건)
 - 상담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
 -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바우처제도 운영
- 인터넷중독 대응을 위한 지속적 전문인력 양성(2,720명)
 -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과 상담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
 - 인터넷과 게임 중독 전문상담사 양성 확대
- 인터넷중독 해소 법제도 및 환경 개선
 - 법제도 개선과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업·홍보 강화
-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효과성 제고
 -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(S-척도) 개발 등 진단척도 고도화
 - 기초 정책연구, 프로그램, 콘텐츠 개발 확대·보급

[별지]

인터넷중독 예방·해소 추진현황 및 '11년 세부 시행계획(案)

2011년 4월

행정안전부, 여성가족부, 문화체육관광부,
교육과학기술부, 방송통신위원회, 보건복지부,
법무부, 국방부

< 목 차 >

I . 인터넷중독 현황	1
II . 인터넷중독 예방·해소 추진성과 진단 ...	3
III . '11년 역점 추진과제	5
붙임: '10년 인터넷중독 해소 추진성과	9

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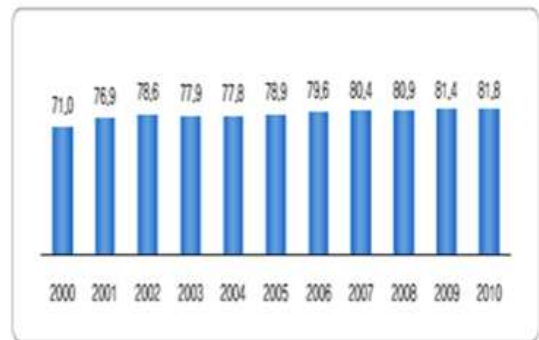
인터넷중독 현황

☐ 정보화 확산 및 인터넷 활용의 일상화

- 유·무선 인터넷 인프라 및 PC·스마트폰 등 개인별 정보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, 인터넷 이용률·사용자가 급격히 증가
 - '10년 현재,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이용자는 77.8%(약 37백만명)
 - ※ 3세이상 인구수 47백만명 중 인터넷사용자수 37백만명('10인터넷진흥원)
 - PC, 노트북, PDA, 스마트폰 등 기기보급율 또한 81.8% 달함



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추이(단위: 천명)



가구 PC 보유율(%)

☐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나, 청소년 고위험군은 오히려 증가

- '10년 실태조사 결과, 중독률·중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(↓0.5%p)
 - 중독률(%) : ['09년] 8.5%(청소년 12.8, 성인 6.4) ⇒ ['10년] 8.0%(청소년 12.4, 성인 5.8)
 - 중독자 수(천명) : ['09년] 1,913(청소년 938, 성인 975) ⇒ ['10년] 1,743(청소년 877, 성인 866)



연도별 인터넷중독률 현황



연도별 인터넷중독자 현황

○ 청소년 인터넷중독 고위험군(High-Risk Group)은 지속적으로 증가

- '잠재위험군'(Potential-Risk Group)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중독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, 고위험군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(0.8%p)

※ 청소년 중독 고위험군 비율 추이(%) : ('08) 2.3% ⇒ ('09) 2.6% ⇒ ('10) 3.1%

※ 청소년 중독 고위험자 수 추이(천명) : ('08) 168천명 ⇒ ('09) 187천명 ⇒ ('10) 218천명

□ 인터넷중독 취약계층의 발생 및 중독률의 심화

○ 월평균 가구소득(경제적 요인), 가구구성 형태(가정환경적 요인) 등의 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이며, '인터넷중독 취약계층'이 발생

- (가구 소득별)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률이 높음

※ 월소득 100~200만원 11.9% > 월소득 500만원 이상 6.6%

- (가족 구성형태별)한부모가정 자녀중독 > 양부모가정 자녀중독

※ 한부모가정 고위험군 6.0% > 양부모가정 고위험군 2.8%

□ 모바일 인터넷 접속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중독현상 확산 우려

○ 스마트폰 이용시간·생활변화 등 조사결과, 전체 11.1%가 중독 우려

- 스마트폰 중독률('10년) : 11.1%(43만명) (고위험 0.1%, 잠재위험 11.0%)

※ '10년 스마트폰 사용자 388만명(9~39세) 중 스마트폰 중독률 : 청소년 25.2%, 성인 9.4%

- 인터넷중독자의 스마트폰 중독률(30.2%)은 일반사용자(9.2%) 3배 이상

< 인터넷중독 현상의 변화 양상 >



Ⅱ 인터넷중독 해소 추진성과 진단

☐ 종합계획 수립 이후, 정부 공동대응을 통한 인터넷중독률 감소

○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으로, 중독자수가 전년 대비 170천명 감소(중독률은 청소년 0.4p%, 성인 0.6p% 감소)

- 최근 3년간 감소 추이 평균(↓0.2%p)대비, '10년 대폭 감소(↓0.5%p)

※ 인터넷 중독률 추이(3년 단위) : ('04) 14.6% ⇒('07) 9.1% ⇒('10) 8.0%

- 인터넷중독 상담서비스, 대상별 예방교육 양적 확대 및 강화

※ 연간 상담 36만건, 예방교육 150만명, 전문인력 양성 1,300명 등 대폭 확대



☐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기반(Governance) 조성

○ 7개 부처 및 지자체 공동 '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' 수립·추진('10.3) 및 유관 부처 정책협의 활동 강화('10.5 ~)

- 부처 공동 정책협의체 구성·운영 및 인터넷중독 문제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('10.9) 개최 등 공동 협력기반 강화

※ 범정부 협의회 : 행안부, 문화부, 교육부, 방통위, 여가부, 법무부, 국방부, 복지부('11)

- 범정부 인터넷중독해소 공감대 형성을 통한 '11년 예산확보 확대

※ 사업 예산 증가 추이 : ('09) 47.33억원 ⇒ ('10) 49.21억원 ⇒ ('11) 130억원

□ 중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사회불안·위협요인으로 확산

-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역기능 위험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
 - 인터넷 중독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가정파괴, 강도, 살인 등 잔혹한 범죄와 가정해체의 사회적 위협요인으로 확산

< 인터넷 중독의 사회문제화 사례 >

- 10년간 인터넷만 해 온 은둔형 외톨이, 사회생활 직후 회사동료 살해('08.4월)
- 20대 무직자, 게임머니 충전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 행위('09.3월)
- 인터넷 중독 부부, 신생아 홀로 방치하여 아사('10.3월)
- 인터넷 게임 중독 중학생 어머니 살해 후 자살('10.11월)
- 게임 중독 어머니, 2세 아들 목졸라 살해('10.12월)
- 게임 중독 남편 만삭부인 살해('11.3월)

- 연령이 어릴수록 인터넷 중독률이 높으며, 청소년 고위험군은 증가 추세
 - ※ 연령별 중독률 : 9세~12세(14.0%) > 13~15세(11.8%) > 16~19세(11.4%)

□ 중독 해소 서비스의 量的 확대 및 質的 다변화 추진 필요

- 전체 인터넷 중독자 대비 예방 및 상담치료 부족
 - 양적 차원의 규모협소 및 교육·상담 서비스 제공 여전히 부족
 - ※ '10년 중독 고위험군 174만명 대비, 상담치료는 36만건(≒6만명)으로 3% 불과
 - 질적 수준에서 체계적 전문성 미흡 및 중독 취약계층 대응 필요
 - ※ 정책수요자별 상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취약계층 대상 해소활동 증진 필요

□ 지역별 추진체계 정비 및 유관부처 공동 협력 지속추진

- 지자체 및 지역상담소와의 협력네트워크 역할분담 체계 미비
 - 지역별 거점 사업수행(전문상담, 교육 등) 시설 및 인프라 산재
 - ※ 부처별 상담 대응기관이 산재되어 수요자 관점에서의 혼란 및 불편 초래
 - ※ 시도인터넷중독상담센터(8개소), 청소년상담지원센터(166개), 정신보건센터(156개) 등

Ⅲ '11년 역점 추진과제

1 인터넷중독 확산 억제를 위한 포괄적 예방교육

- 저연령층(유아·미취학 아동·초등저학년) 대상 예방교육 전개
 - 국공립 유치원, 어린이집, 초등학교 대상 중독 진단검사, 예방교육 및 매체이용습관 형성 활용교육 실시
 - ※ 국공립·사립유치원에 동화, 놀이, 음악, 미술 등 이용 아동 눈높이 특강 실시
- 청소년 대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
 - 학교 및 대상 집단별로 인터넷중독 현황, 사례, 예방법, 시간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인터넷 문화학교,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, YP 지킴이 등 학교별 특성화된 자율 정화활동 지원
 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, 기존 대규모/일회성 특강 교육 이외, 학교별 예방교육/집단상담/자율활동 등을 결합지원 병행
 - 학년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·보급
 - ※ 우수교사 수업동영상, PPT 표준강의안, 대상별 자가학습 프로그램 등
- 성인 대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
 - 학부모, 직장인, 군인 등 자녀동반 참여교육, 중독치유 및 인터넷 사용문화 조성교육 연계 실시
- 뉴미디어 중독 확산 사전예방 및 유해매체 모니터링 활동 전개
 - 스마트폰 몰입 및 역기능 진단을 위한 척도개발(가칭 S-척도) 및 실태조사, 중독 유발매체물 심의·모니터링 강화

○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

- 전국적 중독 해소 대응체계 구축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

※ 지역별 인터넷중독전문상담센터, 청소년지원센터, 정신보건센터, 건강가정
지원센터, 게임과몰입지원센터, 협력병원 등 중독 대응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

- 지역 인터넷중독 상담 전문인력 추가 배치 및 운영 활성화

※ 상담수요 대비 상담인력의 증원을 위해 현 근무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

- 중독 고위험 청소년 대상 개인·집단상담, 종합 정밀검사

※ 아람누리상담콜(1599-0075) 등 전화 및 사이버 상담, 내방상담 등 분야별 제공

○ 인터넷중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화

- 인터넷중독 쉼터캠프 개최, 대안활동 지원, 청소년 동반자
연계 등 지속적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

※ 중독 고위험 대상자 ‘청소년 동반자(YC)’ 연계지원 및 장기기숙형 치료
캠프(인터넷 레스큐스쿨) 등 차별화된 사후관리 기능 강화

- 교육청 및 학교 내 Wee센터를 활용한 전문가 파견상담 지원

○ 중독 취약계층 대상 ‘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’ 실시

- 저소득층, 은둔형외톨이, 한부모 가정자녀 등 내방상담이
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

※ 중독 취약계층 대상 방문상담사업 : (‘11년) 1,000명 대상 / 전국 10개 권역

- 인터넷·게임중독 해소 바우처 지원제도 운영

※ 저소득층 자녀 등 대상, 상담, 멘토링, 운동 등 대체활동, 가족캠프 등 서비스 제공

3 인터넷중독 예방·해소를 위한 지속적 전문인력 양성

○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을 위한 학교현장 교원 역량강화

- 유치원·초·중·고 교원대상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

※ 각급학교 교사 대상 온-오프라인 인터넷중독 해소 연수과정 운영('11년:500명)

- 건전 게임문화 지도인력 등 특정분야 인력 양성

※ 게임문화지도자, 사이버범죄 보호관찰관 등 분야별 대응 전문가 양성 확대

○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과정 운영

- 인터넷·게임 중독 전문상담사 양성의 확대·활용 강화

※ 상담, 심리, 교육 등 유관학과 전문가 대상, 인터넷중독 상담사 양성 및 심화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여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

- 중독 상담기법, 수퍼비전 등 전문상담사 양성 및 전문화

※ 전문성 강화 및 상담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

- 전문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 검토

4 인터넷중독예방 관련 법제도 및 환경 개선

○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

- 정보법, 게임법 개정 및 개별법안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

※ 청소년 대상 심야 섯다운제 도입, 민간기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

○ 인터넷중독 해소 관련 부처 간 역할체계 명확화

- 부처간 정책협의체 운영 및 공동 협력활동, 홍보 등 강화

※ 공동 리플렛, 정책논문/극복수기/상담사례 공모전 등 공동 개최 추진

5

인터넷중독 정책효과성 및 과학성 제고

○ 인터넷중독 실태조사·전수조사 실시 및 사후조치 연계

- 중독의 과학적 진단 및 위험군별 사후대응 프로그램 확대

※ 전국 실태조사의 표본수 및 조사대상 확대, 전수조사 결과 대응 강화

-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,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등

※ 순기능 측면의 게임 활용방안, 상담-치료 프로그램의 적합성 등 연구

○ 기초 정책연구, 프로그램, 콘텐츠 개발 확대·보급

- 진단척도 고도화, 전문과정 커리큘럼 개발 등 연구 확대

※ 정책수행의 내실화를 위한 K-척도 고도화, 교육 커리큘럼 등 연구 추진

- 유관 기관간 인프라, 콘텐츠 등 공유·집적 강화

※ 시도 교육청, 유관 기관 등에서 개발된 콘텐츠의 활용확대를 위한 정보공유

6

'11년 부처별 사업예산

○ 소요 예산 : '11년 총 130억원(유관 6개 부처 예산합계)

구 분	'10년도	'11년도	전년대비
소요예산 (억원)	50.33	133.95	83.6증(266%)
문화체육관광부	5.20	23.00	17.8 증(442%)
여성가족부	12.33	22.25	9.9 증(180%)
행정안전부	13.52	46.62	33.1 증(344%)
교육과학기술부	7.46	7.07	0.39 감(13.40%)
방송통신위원회	9.82	15.11	5.29 증(154%)
보건복지부	2.00	19.90	17.9 증(995%)

세부 정책 과제	계	관계 부처			
		행안부	문화부	여가부	교과부
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	1,519,673	679,734	459,939	380,000	-
- 학생/성인 등 대상 예방교육(명)	1,448,806	679,734	389,072	380,000	타부처포함
-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(명)	70,867	-	70,867	-	-
②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	360,953	97,609	108,614	154,730	-
- 인터넷중독 상담 서비스 제공(건)	359,695	97,081	108,614	154,000	-
- 병원연계 치료지원(명)	483	-	-	483	-
- 캠프 운영(회/명)	28(775)	16(528)	-	12(247)	-
③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	1,328	545	171	502	110
- 전문상담사 양성(명)	830	328	-	502	-
- 교원 직무연수(명)	327	217	-	-	110
- 게임 리터러시 지도사(명)	171	-	171	-	-
④ 인터넷중독 정책효과성 제고	6	3	1	1	1
-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및 연구(건)	2	2	-	-	-
-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수조사(건)	3	1	-	1	1
- 게임역기능 진단척도 개발(건)	1	-	1	-	-